

文 대통령이 말하는 방북 여건, 어떻게 있나

# 北美 대화가 기본... 궁극적으로 '북한 非핵화'

평창 올림픽서 획기적 전기 마련  
'평화 모멘텀' 발전 방향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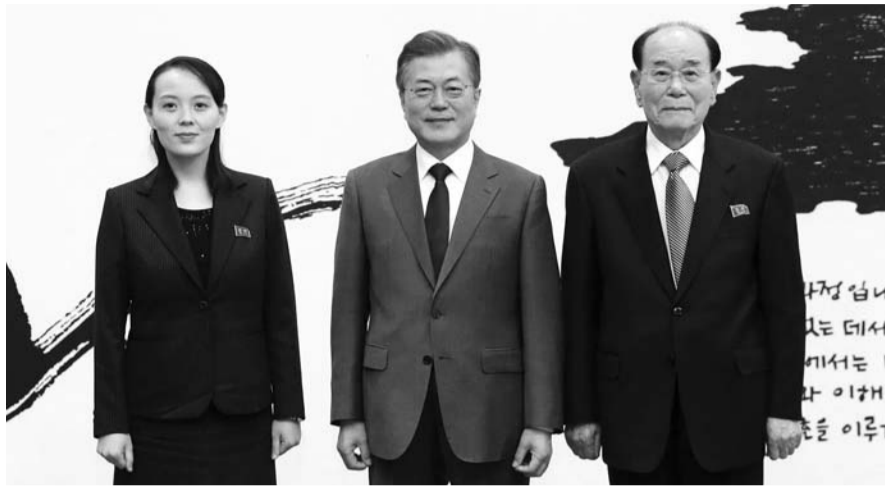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속도로 발전한 남북 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동생 김여정 특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는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요청대로 북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얼마든지 있다고 화답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는 말 그대로 해석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덧붙인 '여건'이 과제지만 정상회담까지 성사돼 관계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창 올림픽 기간 중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남북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오른쪽)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을 관람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국무총리는 이날 낮 김 상임위원장, 김 제1부부장 등과 서울 광진구 워커히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들 고위급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한 뒤 저녁

엔 강릉으로 달려가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방남한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2박3일의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김영남 상임위원장과는 5차례, 김여정 제1부부장과는 4차례 자리를 함께 했다.

개막식이 열린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선 문 대통령의 바로 뒷자리 옆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란히 앉아 행사를 관람했다. 강릉 아이스하

키장에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문 대통령과 김 상임위원장, 김 제1부부장이 앉아 단일팀을 응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북한 고위급대표의 이같은 행보만으로도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한 셈이다.

바흐 IOC 위원장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통합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오늘 한국과 북한 선수들이 공동 입장을 한 것"이라며 "이제 평창에서 남북한 선수들은 전 세계에 또 한번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주말 사이에 조성된 '평창 평화 모멘텀'을 향후 남북 양측이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는지다.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한 김여정 특사의 말에 문 대통령이 답한 '여건'이 속제로 남게 된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10일 청와대 접견 이후 가진 문 대통령과의 오찬자리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평양에서 뵈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을 만나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우선 순위엔 북미간 대화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평창에서 조우할 것으로 관측됐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간 만남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남과 북은 가까워졌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만남' 또는 '대화'를 위한 높은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곳이 또한 평창이기도 했다.

남북이 이번에 평창과 서울에서 만들어낸 기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 여건 중 핵심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남·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이날 밤 평양으로 돌아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온누리상품권 몸사리던 재계 일부기업 올해는 대량구매 나서

올 구매액, 전년비 100억원 많아  
인식·할인을 커져... 개인 구매도 ↑

설 명절이 바짝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주요 그룹들이 올해엔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6년 당시 전체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2744억원으로 전년도의 1939억원보다 805억원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기업 구매액이 912억원으로 전년도의 3분의1 토막에 그쳤다.

2016년 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연루되며 이듬해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들어선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기업들은 383억3000만원 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기업 구매액 282억4000만원에 비해 100억원 가량 많은 액수다.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가 1월 말에 있었던 것에 비춰볼 때 올해 설 연휴 이전에 이미 지난해 구매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기업 중에서도 주요 그룹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일반적으로 그룹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요 그룹은 그동안 설이나 추석 등마다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명절 딱딱' 형태로 지금, 임직원들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독려했다. 그러면서도 구매액 규모를 높이는 다른 기업들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다.

실제 삼성과 현대차는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기업 구매액 1·2위를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보다 현대차의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좀더 많았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올해 554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도 주요 계열사 차원에서 올 들어 온누리상품권을 일부 산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체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온누리상품권 기업 구매는 주요 그룹들의 움직임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룹 한 곳 당 수 십억~수 백억 원씩 사들이는 터라 구매가 위축될 경우 전체 구매액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3258억원 어치가 팔렸던 온누리상품권은 이듬해 4801억원, 2015년 8607억원에서 2016년엔 1조946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 벽을 넘었지만 지난해 기업 구매액이 전년의 33% 수준에 그치며 전체 판매액도 1조743억원으로 주춤했다.

반면 이 가운데 개인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5458억(2015년)→6875억(2016년)→8454억원(2017년)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도 1210억→1328억→1376억원 등으로 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설이나 추석에 개인들에 대한 할인도 확대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설에도 개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을 14일까지는 10%, 이달 28일까지는 5%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또 지난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가운데 10%(843억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올해엔 30%(2529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 국민의당, 통합 전당원투표서 73% 찬성

합당여부 묻는 투표 5만여명 참여  
安 "대안야당의 역할 공고히 해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기 위한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73.56%가 찬성표를 던지며 통합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이동섭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앞서 진행된 케이보팅(K-voting) 온라인투표(8~9일), ARS 투표(10일) 결과를 보고했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에는 5만3981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3만9708명(73.56%)은 찬성표를 1만4056명(26.04%)은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수입기구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5만3981명 중 3만9697명(73.54%)가 찬성, 1만3732명(25.44%)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투표 결과에 따라 권은희 중앙위원장은 바른정당과의 합당 및 수입기구 설치의 건을 결의했으며, 수입기구는 최고위원회를 지명했다.

이로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절차는 오는 13일 통합전당대회까지 수입기구 합동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안철수 대표는 "미래로 가는 문을 함께 열 수 있게 됐다. 과거 정치와 결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임시중앙위원회에서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을 결의한 뒤 꽃다발을 들고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록 의원, 김동철 원내대표, 안철수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고 미래정치로 나가는 것이자, 기득권 양당 구태정치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것"이라며 "합당 결의에 이르기까지 비난과 폄훼도 그치지 않았다. 앞으로도 장밋빛 미래가 거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태어날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 대안야당의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원투표에서의 찬성률은 지난 안대표의 재선임과 연계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전당원투표에서의 찬성률인 74.6%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통합 문제를 둔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당원·의원들의 탈당과 민주평화당 창당 등

안 대표를 필두로 한 통합찬성파에게는 악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막상 투표 결과에서는 이른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13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절차를 마무리짓고, 설 명절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의 홍보에 본격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통합과 동시에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 컨벤션효과를 일으켜 지난 국민의당 창당 당시의 '바람'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 민평당 '텃밭' 호남 민심 다지기 행보



(왼쪽 세 번째부터)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11일 오후 전북 전주 남부시장에서 설 명절 장을 보며 흥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호남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이 이번 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호남 적자'임을 강조하며 기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민주평화당이 첫 지방일정으로 전주·광주를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무게감을 뽐내며

지지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등을 방문해 시장 상인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만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당 홍보도 동시에 나섰다.

이들은 시장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받고,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며 소통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성명, 설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여러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가졌다. /이창원 기자